

업 무 현 황

2025. 10. 24.

I. 일반 현황

1. 조직

2. 정원 및 현원

- 처장 : 정무직 공무원
- 차장 : 일반직 고위공무원
- 조직 구성: 1조정관 6국 1정책관

(‘25. 9. 25. 기준)



('25. 9. 25. 기준, 단위: 명)

인 원 직 급	정 원	현 원	과 부 족
계	239	233	△6
처 장	1	1	0
차 장	1	1	0
고위공무원	13	14	1
3급 또는 4급	12	13	1
4 급	27	33	6
4급 또는 5급	28	23	△5
행정·전산 5급	97	92	△5
행정·전산·운전 6급	31	30	△1
행정·전산 7급	10	11	1
행정·전산 8급	8	7	△1
행정·전산 9급	3	1	△2
전문경력관	1	1	0
기록연구관	1	1	0
학예연구사	1	1	0
운전·사무운영	5	4	△1

II. 예산 집행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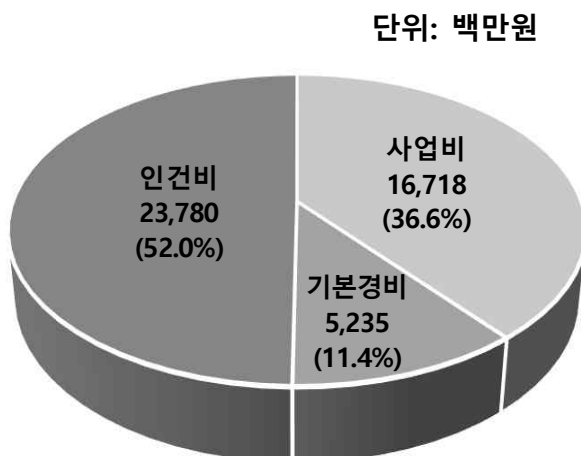
예산 집행현황

○ 세입 ·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2024년도 예산			2025년도 예산		전년 대비	
	예산(A)	추경	결산	예산(B)	집행액 (9. 25. 기준)	증감액 (B-A)	증감률(%) [(B-A)/A]
계	45,418	-	44,290	45,733	34,539	315	0.7
인 건 비	22,612	-	22,736	23,780	17,427	1,168	5.2
기 본 경 비	5,032	-	4,750	5,235	3,372	203	4.0
사 업 비	17,774	-	16,804	16,718	13,740	△1,056	△5.9

■ '25년도 기능별 예산 구조



■ '25년도 사업별 예산 현황

- 법제업무정보화추진 : 8,046백만원
- 법령정보제공 : 1,552백만원
- 세계법제정보서비스 : 1,682백만원
-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: 1,802백만원
-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: 1,362백만원
- 법제정비 : 1,184백만원
- 행정법제 혁신 : 486백만원
- 법령심사지원 : 311백만원
- 외국법제기관교류 : 243백만원
- 법제정책연구개발 : 50백만원

Ⅲ.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

1. 정부입법 총괄 · 관리
2. 법령심사 · 법제지원
3. 법령해석
4. 법령정비
5. 법제개선
6.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지원
7. 법령정보서비스 제공
8. 법제교육
9. 법제교류 · 협력

□ 주요 내용

-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 ·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및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
-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이견 조정 및 국회 법안 심의 지원

□ 추진 실적

- 정부 주요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법률 제 · 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**2025년도 정부입법계획** 수립('25.1.21.)
 -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와 각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**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** 수립('25.9.23.)
- 국회 통과 법률의 적기 시행을 위한 **하위법령 제때 마련 추진**
 - '25년 총 248건 제때 마련(하위법령 제때 마련율 100%, '25.9.25. 기준)
- 국정과제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 강화를 위해 **국정입법상황실 설치**('25.8.25.)
-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지원 및 부처 이견 법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입장 마련
 - * '25년 추진실적(9.25. 기준): 법리적 검토 지원 226건, 부처 이견 조정 109건

□ 향후 계획

-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 이행을 위한 전략적 입법 총괄 · 관리
 - 입법 추진 전 과정 실시간 관리, 입법 장애요인 선제적 파악 및 맞춤형 대응방안 제시
-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종합 · 조정하여 국회의 법안 심사 적극 지원
 - 법제처에 접수된 이견과 이견조정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이견 법안 조정 실시

□ 주요 내용

- 정부입법 과정에서 위헌·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, 헌법, 법률·조약, 대통령령, 총리령·부령 등에 이르는 국가법령 체계의 통일성 유지
- 국가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의 조문화 지원

□ 추진 실적

- 법률 76건, 대통령령 597건 등 총 1,289건 법령심사('25.9.25. 기준)

【 최근 3년간 연도별 법령심사 현황 】

(단위 : 건)

연도 \ 구분	계	법률	조약	대통령령	총리령	훈령
2023년	2,070	219	32	907	871	41
2024년	2,447	363	36	1,076	944	28
2025년(9. 25. 기준)	1,289	76	17	597	577	22

- 법률 34건, 대통령령 61건 등 총 211건 입안지원('25.9.25. 기준)

【 최근 3년간 연도별 법령 입안지원 현황 】

(단위 : 건)

연도 \ 구분	계	법률	대통령령	총리령·부령	행정규칙
2023년	282	63	111	60	48
2024년	324	69	108	67	80
2025년(9. 25. 기준)	211	34	61	42	74

* (입안지원 사례: 「여권법 시행령」)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문화를 지원하여,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권리가 적절하게 조화되는 법령안 마련에 기여('25.10.9. 시행)

□ 향후 계획

- 법령안의 법리적 쟁점 검토·대안 제시, 부처협의·입법예고 단계부터 사전심사 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령심사로 정부입법을 종합 지원
- 주요 정책 법령안에 대한 선제적 법제지원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 -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 필요시 법령안 입안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 지원

□ 주요 내용

- 행정부 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정부 견해의 통일성 유지, 법령 의미의 명확한 제시를 통한 법 집행의 객관성·신속성 제고
-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한 규제의 확대적용이나 법령의 소극적·차별적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

□ 추진 실적

- 법령해석심의위원회 32회 개최, 273건의 법령해석 안건 회신('25.9.25. 기준)
 -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적극적 법령해석 실시
-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계 국민이 참여*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신뢰성·공정성 제고

* '25년 민원인 참여 안건 40건('25.9.25. 기준)

- 법령해석 요청자와 법령 소관 부처 간의 의견 합치 가능성 검토, 대안 제시 등 협의·조정* 활성화, 법령에 관한 이건의 신속한 해결 도모

* (협의·조정 처리) '23년 169건, '24년 191건, '25년 112건('25.9.25. 기준)

- 주택·건축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* 7회(12건) 운영('25.9.25. 기준)

* 기술적·전문적 사항이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안건 대상

** (전문위원회 운영) '22년 2회, '23년 9회, '24년 9회, '25년 7회('25.9.25. 기준)

□ 향후 계획

-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고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해석 실시
- 법령해석 과정에서 의견진술 등 관계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
- 법령해석의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소위원회·전문위원회의 확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령해석 지속 추진
- 법령해석 20주년 세미나('25.12.12.) 개최, 법령해석 사례분석 등을 통해 그 동안의 법령해석 제도 운영 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

□ 주요 내용

- 국민·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는 법령정비 추진
-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(불합리한 행정입법 정비)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체감형 규제개선 실시
 -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 발족(25.7월말~), 정비과제 발굴·추진(8월~)

※ 발굴 주요 사례

- ① 4면 고정벽체(콘크리트벽)로 구분된 공간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던 것을 가벽·칸막이 등으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 가능하도록 개선
- ② 취약 계층이 주로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

- (사회적 약자 등 보호) ①청년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임신·출산, 군복무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·면제 근거 마련*, ②청각장애인에 대한 임용시험 어학시험 성적기준 별도 마련을 위한 근거 신설 등** 법령정비 추진

* (청년) 대통령령 8개 및 총리령·부령 14개 법령정비 완료(25.9월)

** (사회적 약자) 9개 법률 국회 제출, 대통령령 3개 및 부령 4개 법령정비 완료(25.10월)

- (경제형별 개선) 경제활동 관련 형벌의 과태료 전환, 형량 조정 등 추진*
 - 경제형별 합리화 과제 검토 및 입법절차 지원(경제형별 합리화 TF 협업, '25.10월~12월)
 - * 기재부·법무부와 협업, 6개 법률 국회 제출(25.5월)

□ 추진 계획

- 불합리한 행정입법 정비 대상 과제 소관부처 협의 및 순차 정비(25.9월~)
-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비 과제 신속 정비
 - 영업공간의 최소 면적기준 폐지·완화, 신규 사업자의 인력기준 완화 등의 근거 마련(25.12월 법령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)
-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정책수요자 의견 청취,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법령 정비과제 적극 발굴 및 지속 정비 추진

□ 주요 내용

- 신산업·신기술이 성장을 주도하는 안전한 미래사회 대비 법제개선 추진
- 행정규칙 속에 남아 있는 권위적·차별적 규정 정비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(행정기본법) 처분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·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*
 - * 「행정기본법」 개정('25.3.18.공포, 9.19.시행)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완료, 이의신청 특례 규정(법률 9건, 대령 11건, 부령 1건) 및 시행규칙 서식 개정(부령 14건) 추진 중
- (규제법제 개선) 신기술 활용한 규제특례사업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압류 금지 법률안(6건) 발의('25.4.29.) 지원
- (재해예방)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인허가취소·영업정지 법률(280여개) 전수조사·검토 등 『노동안전 종합대책』('25.9.15) 입법지원
- (행정규칙) 권위적·차별적 규정 정비*('25.9.25. 기준 171건)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·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('25.9.25. 기준 26건) 등 정비과제 발굴
 - *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: 71건의 정비과제 중 64건 정비 완료('25.9.25. 기준)

□ 향후 계획

- 과징금 체납 상한금의 일반규정을 신설한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라 합리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('26.3월 시행 예정)
-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법령을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고 중복·유사 과제까지 발굴·정비하는 규제법령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*
 - *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협의 등을 거쳐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개정 추진('25.12월)
- 일·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인정하는 25개 법령 일괄개정 등 법제개선 추진('25.12월)
- 반복적 재해 발생을 인허가취소·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하는 법제개선 추진
- 행정규칙 정비 권고안(총 197건)에 대해 부처협의 및 정비과제 확정* 및 정비 추진
 - * '25.9.25. 기준 152건 확정, 10월까지 남은 45건 정비과제 확정 예정

□ 주요 내용

-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
- 자치법규 관련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 제시, 조례 자율정비 지원 등을 통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· 품질 제고

□ 추진 실적

-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된 자치입법권 강화* 일괄정비 법률안 81건 국회 제출('24. 6월), 28건 국회 통과(53개 계류중, '25.9.25. 기준)
 - *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 '승인 · 협의 · 보고'를 '통보' 등으로 전환하고, 법령에서 정하던 지방사무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
-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* 72개(22개 법률안 국회제출 및 50개 하위법령 개정완료, '25.3월) 및 행정규칙 정비과제 54개 정비 완료('25.9.25. 기준)
 - *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· 운영 시설, 각종 보조 · 지원 사업 등의 지원 대상 · 범위 등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확대
-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자치법규 입안 · 해석 관련 상담 · 자문* 등 제공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
 - * 자치법규 의견제시 회신 건수 : ('23) 269건, ('24) 269건, ('25.9.25.기준) 200건

□ 향후 계획

- 국회 계류 법률안이 원활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설명 및 지원
- 국가정책 · 입법 과정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는 법령정비 추진
- 지역별 특화 정책 신속 구현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제시, 입법모델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규제완화나 주민권익 보호 등 우수 자치법규 발굴 · 확산을 위한 참고조례안 제공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

□ 주요 내용

-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편의성·접근성 개선 및 인공지능·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
-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에 대해 그림·사진·표 등 시각 콘텐츠 개발·제공
-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

□ 추진 실적

- 기관별로 제공하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합·확대 제공하기 위한 국가기관 결정선례 개방체계 구축 추진('25.6월~)
* '22~'24년까지 22개 기관 결정선례 개방, '25년 32개 기관 추가 개방 예정
- 그래프를 이용한 법령검색, 연관 법령정보 한 화면에서 보기 등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고도화 추진('25.6월~)
- 환경, 주택 분야 등 80개 법령을 대상으로 신규 시각 콘텐츠(530여개) 개발 중
* 시각 콘텐츠 개발 개수 : ('21년) 431개, ('23년) 440개, ('24년) 484건
- 장기요양보험, 요양보호사, 각종 연금 등 사회적 관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작·제공(생활법령 50건, 생활조례 983건 등)

□ 향후 계획

-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국가기관 결정선례 대국민 서비스 확대 제공('25.11월~)
-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로 법령, 판례,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찾고,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('26년부터 구축 예정)
-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이용편의성 증진('26년 예정)
-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'25년 신규 콘텐츠 530여개 국가법령정보센터 탑재 및 서비스 제공('25.10월·12월)
- 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비, 일상생활안전 등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지속 개발(생활법령 20건 생활조례 241건 등)

□ 주요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

-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('25.9.26. 20:15경)로,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정부입법시스템, 법제처 누리집 등 **12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**
 - ※ 국가법령정보·정부입법시스템 핵심 서버가 화재로 전소된 7-1구역에 위치 신속 복구에 상당한 애로
 - 10. 20. 현재 법제처 누리집, 생활법령정보서비스,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법제포털시스템(내부) 등 일부 시스템 복구
 -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제처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 지속으로 국민 불편 가중

□ 주요 조치 사항

- **(피해 상황 점검)** 화재 발생 당일 · 익일 상황대책회의(9. 26.) 및 긴급상황 점검회의(9. 27.) 개최, 피해 상황 점검 및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논의
 - * 중대본 재난재해 위기경보 '심각'단계 발령 이후 법제처 비상근무체계 가동 중(9. 27.~)
- **(법령정보제공)** 대법원 종합법률정보,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및 국세 법령정보 등 대체 사이트 안내(9. 28.)
- **(법제업무 연속성)** 법제처 누리집 임시게시판* 등을 활용하여 법제 심사 및 법령해석 접수 등 법제업무의 중단 없는 추진에 만전
 - * 입법예고, 법령해석 신청 및 결과 회신, 최신 공포법령 공고 등

□ 향후 계획

- **(시스템 복구)**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제처 소관 시스템의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협조 및 대응
 -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일정* 및 우선순위에 맞추어 신속 복구
 - *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0월 말까지 대다수 시스템의 정상 재개를 목표로 복구 진행 중
- **(법령정보 제공 등)**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정부입법시스템 등의 복구 시 시스템 장애기간 동안 수기로 관리한 공포법령 등 법령정보의 DB화 신속 추진으로 차질 없는 대국민 서비스 재개 추진

□ 주요 내용

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·체계적인 법제교육 실시

□ 그간 추진실적

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법제전문교육 실시
 - 법령안 편집기 실습과정 신설(총 3회 운영), 지방의회 의원 및 정책지원관 대상의 맞춤형 법제연수과정(총 7회 운영) 확대 실시 등

【최근 3년간 법제교육 수료인원】

수료 연인원(명)	2023년	2024년	2025년 (9.25. 기준)
집합교육	39,044명	39,568명	29,081명
사이버교육	31,429명	40,252명	35,089명
합계	70,473명	79,820명	64,170명

- 태안 법제교육원 개원('24.11.4.)에 따른 법제교육 운영체계 개선
 - 3일 이상 장기교육과정(총 65회 과정) 운영 및 충북·대구·부산교육청 등 기관교육과정과 연계한 법제교육(총 24회 과정) 실시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헌법 관련 법제교육 확대
 -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 기본원칙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헌법의 이해 및 헌법과 법령·자치법규 입안 교육과정의 확대 실시
- 현안 해결 및 실무에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 강화
 - 사례 중심의 법령입안·해석과정 및 실습 중심의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교육과정 지속 운영
-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내실화
 - 자치법규 입안 종합과정 및 지방의회 대상 법제연수과정 지속 추진

□ 주요 내용

- 우리 국민 · 기업의 대외 경제활동 · 교류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
- 상호 방문, 국제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 경험을 외국과 공유
- ODA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· 베트남 등에 대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

□ 그간 추진실적

- 유관 부처(문체부, 복지부, 식약처 등)와 협력하여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,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번역본을 K-산업별로 제공

<K-산업별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현황('25. 9. 25. 기준)>

구분	K-원자력	K-콘텐츠	K-의료	K-화장품	K-식품	K-건설	K-시푸드	합계
법령 수	364건	287건	74건	61건	55건	4건	11건	856건

- 베트남 법무부와의 영상회의(기관장급) 등 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
 - * 법제처 방문 면담(8회), 외국기관 방문(4회) 등의 상호 교류 확대
- 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법제 분야 협의체인 '아시아 법제 기구 협의체' 준비위원회 발족('24.11.1) 및 설립 준비 활동
-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정보시스템 전파를 위한 ODA 사업 추진,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기반 마련
 - * (인도네시아)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('23.~'28.)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제처-인니 법무부 MOU 체결('25.2.6.)
 - * (네팔)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('24.~'25.) 완료 및 PILOT 사업 진행('25.~'27.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K-산업 분야별 해외 법령정보 제공 확대(K-로봇, 방산 등) 추진
- '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'를 설립하고,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*('25.11월)를 개최하는 등 외국 법제기관과의 법제 협력 강화
 - * 주제 : 인공지능(AI)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 및 발전 방향
- 법령정보시스템 ODA 사업 지속 확대 및 UNDP ·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ODA 사업 다각화 추진

